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51
----------	------

제출연월일: 2021. 5. 28.

제 출 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제정 이유

구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장)

-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구민권익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안 제2장)

- 기능(안 제3조)
-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안 제4조 ~ 제10조)
- 구민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안 제11조 ~ 제17조)

다. 고충민원의 처리 등(안 제3장)

- 고충민원의 처리(안 제18조)
-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안 제19조)
- 국민권익위와의 관계(안 제20조)

라. 구민권익보호관에 대한 협조·지원(안 제4장)

- 사무기구(안 제21조)
- 운영지원(안 제22조)

3. 근거법규: 따로 붙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 ~ 제52조

4.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해당사항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해당사항 없음

다. 성별영향 평가: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과-16046호, 2021. 4. 16.)

라. 입법예고: 2021. 4. 5. ~ 4. 26.(21일간) / 의견없음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구민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법·부당 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또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거나 구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신청인”은 이 조례에 따라 구민권익보호관에게 고충민원을 신청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소속기관 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법령 등에 따라 그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구민권익보호관(이하 “권익보호관”)은 구 또는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5. “시민사회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

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2장 권익보호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기능)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청인의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조사·처리
2. 권익보호관이 직접 발의한 고충과 관련된 사안의 채택 및 조사
3.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 고충민원과 관련된 조사 및 합의, 조정,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 처리
4. 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등과 관련하여 권익보호관에게 의뢰하는 사안 조사·처리
5.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조사 및 합의, 조정 등 처리
6. 구청장 및 구의회에 권익보호관 운영에 대한 연례보고서 제출
7. 직권조사 시 구청장 및 구의회에 특별보고서 제출
8. 권익보호관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 조사와 평가
9. 권익보호관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10. 그 밖에 권익보호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조사·처리

제4조(권익보호관의 구성) ① 권익보호관은 구청장 소속하에 두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보장한다.

② 권익보호관은 대표권익보호관을 포함하여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권익보호관은 호선(互選)한다.

③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구의회 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퇴직한 사람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했던 사람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④ 권익보호관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권익보호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② 권익보호관이 궐위된 때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권익보호관을 위촉해야 한다.

③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않는다.

1. 심신장애,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겸직금지 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6조(제척) 권익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除斥)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본인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
4. 구민권익보호관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
5. 본인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7조(회의) ① 권익보호관은 직무범위를 서로 다르게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1. 시정권고, 제도개선 권고, 감사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그 밖에 대표권익보호관이 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직무관할) 권익보호관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할

권을 가진다.

1. 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2.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3. 구로부터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제9조(권익보호관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권익보호관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정당법」 제23조에 따라 정당에 입당한 당원

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사람

제10조(겸직금지) 권익보호관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1조(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 ① 구청장은 권익보호관을 선발·추천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권익보호관 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권익보호관 후보자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제1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1.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
3.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부구청장
5. 주민자치국장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4조(임기) 위원회는 권익보호관 추천이 끝난 후 자동 해산되며, 위원도 해촉된다.

제15조(제척) 위원이 권익보호관 추천 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16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권익보호관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제18조(고충민원의 처리) 제3조제1호의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할 경우 권익위법을 준용한다.

제19조(운영상황 보고 등) ① 권익보호관은 매년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한 경우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20조(국민권익위와의 관계) ① 고충민원을 처리할 경우 권익보호관과 국민권익위원회는 서로 독립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협의 또는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권익보호관은 다수민원, 공공갈등 민원, 복합민원 또는 중앙차원의 법·정책·제도 등에 관한 사안 중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4장 권익보호관에 대한 협조·지원

제21조(사무기구) ① 구청장은 권익보호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② 권익보호관은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고충민원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조사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운영지원) ① 구청장은 권익보호관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경우 권익보호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14 (제236회-행정자치위제4차부록)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권익보호관이 자문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거법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
4.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
6.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
7.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 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
8.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33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건축사·세무사·공인회계사·기술사·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④ 결원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34조(활동비 지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제32조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위원회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15조, 제16조제3항, 제17조, 제18조, 제25조 및 제83조의2제1항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9. 4. 16.>

제36조(사무기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에는 사무기구의 장과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37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 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매년 그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보고하

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제38조(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9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① 누구든지(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위원회 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권익위원회”라 한다)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나의 권익위원회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신청인은 다른 권익위원회에 대하여도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
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3.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신청인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충민원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권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

④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권익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0조(동일한 고충민원의 상호 통보) 신청인이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동일한 고충민원을 둘 이상의 권익위원회에 각각 신청한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권익위원회는 상호 협력하여 고충민원을 처리하거나 제43조에 따라 이송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4. 16.]

제41조(고충민원의 조사)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고충민원의 내용이 거짓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등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중지 또는 중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2조(조사의 방법) ① 권익위원회는 제41조에 따라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설명요구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진술 등의 요구
3. 조사사항과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시설 등에 대한 실지조사
4. 감정의 의뢰

② 권익위원회의 직원이 제1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거나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위원회의 요구나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3조(고충민원의 이송 등) ① 권익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등에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고충민원을 각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을 이송 또는 각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권리의 구제에 필요한 절차와 조치에 관하여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6.>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의 조사가 착수된 고충민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④ 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이송받은 행정기관등의 장은 권익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익위원회에 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 4. 16.>

⑤ 권익위원회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권익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이송한 고충민원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충민원이 이송된 때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4. 16.> [제목개정 2019. 4. 16.]

제44조(합의의 권고) 권익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고충민원에 대한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5조(조정) ① 권익위원회는 다수인이 관련되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고충민원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②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고 권익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8. 4. 17.>

③ 제2항에 따른 조정은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제46조(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①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처분 등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적절한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 4. 16.>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49조(결정의 통지)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1조(감사의 의뢰) 고충민원의 조사·처리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위원회는 감사원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2조(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권익보호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2항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미첨부 사유

- 연간 비용 추계

세부내역	산출근거	비고
계	14,980천 원	구비
구민권익보호관 수당	3명×100천 원×3회×12월 = 10,800천 원	
자문위원 수당	70천 원×2×12월 = 1,680천 원	
운영비 (운영상황 보고서 제작 등)	2,500천 원	

3. 작성자

- 소 속: 주민소통과
- 직 급: 지방행정주사
- 이 름: 목봉석
- 연락처: 052-290-3111